



대표전화: 1661-8385

www.thesegye.com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제 3274호〉

이재명 대통령,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 법인세 1%p 인상도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한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이중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보건

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의료계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새 정부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은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은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2026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이에 2026년 사업소득부터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투자가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으면 ▲ 2천만원 이하 14% ▲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공포안도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궤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산·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대통령령 개정안과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기준 등을 정비하는 49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대거 의결됐다.

이를 통해 국가적 과제나 지방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 협의체에서 추천된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적 과제나 지방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 협의체에서 추천된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해운 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및 인력 요건도 완화됐다.

이밖에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국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상사가 아닌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업무보고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며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했다.

최근 업무보고를 두고 지나친 기강 잡기 혹은 망신 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생중계 방식을 택한 취지를 다시금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이 대통령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라. 모르는 데 아는 척 하는 게 진짜 문제이자 못된 것"이라며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고자 슬쩍 허위보고를 하거나 왜곡보고를 해선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재봉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친한계 김종혁에 중징계 권고 "당내 갈등 재점화"

당원권 정지 2년에 금 "정당한 비판 막는 파시스트적 태도

당계 사태' 조사는 계속...한동훈 "민주주의 돌로 쳐 죽일 수 없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16일 친한계 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권고키로 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계시판'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위의 조사 중에 나온 이번 조치에 대해 친한계가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선 당무감사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 "김 당협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 10월 사이 다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원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며 "김 위원장의 양과 질을 생각할 때 현저히 균형을 상실했기에 결과적으로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종교 차별적 발언을 하고,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어떤 말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것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침묵을 지키며 해당 행위를 한 것도 있다"며 "발언의 양과 질을 생각할 때 현저히 균형을 상실했기에 결과적으로

로 상대 당에 오히려 유리하게 활용됐다는 점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임명했다.

당무감사위는 이 위원장 취임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등 당론에 반하는 언행을 했다는 점, 신천지 등 특정 종교를 사이비로 규정해 차별적 표현을 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당무감사위의 이번 결정은 당무감사

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한 가운데 내려졌다. 국민의힘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다.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조사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정당에서 당연히 오갈 수 있는 정당한 비판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로, 정당민주주의와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말살하려는 파시스트적 태도"며 "이 위원장은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에서도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봉 기자

열린의회, 국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



아연석 의원



고영한 의원



김용술 의원



도병두 의원



정순기 의원



장규관 의원



정재동 의원



임석진 의원



문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

열린의회, 국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
의원

2025년 한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금천구의회가 되겠습니다.

- 금천구의회 의원 일정 -

